

위기가구 발굴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정확한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 방안 등 논의 -
- 9월 18일부터 제5차 사각지대 발굴조사 실시 -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보유 아동 691명 소재·안전 확인, 7명 수사 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5일(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및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위기가구발굴지원팀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23.5)을 통해 본인이 기재한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입수 가능

아울러, 이날 회의를 계기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전주시 관계자에게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하면서, “복지부와 전주시가 협력해 향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9월 18일부터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

한편, 9월 18일(월)부터 올해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는 중앙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약 16만 명 규모*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 발굴 대상을 추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에는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 대상에 추가하여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격월 주기로 진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실업 3개월 이상 금융연체자, 최근 금융연체 건수 증가 대상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등 확인 조사 결과>

그간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15~'23.5월 출생) 전수조사,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 등을 통해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추가 조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23.7.6일 기준)*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조사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15~'23.5월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을 확인하였으나 수사의뢰하지 않은 사망 아동(228명)에 대해 확인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하는 13자리 번호

**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7.18, 보도참고자료), '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조사 결과(8.16, 보도참고자료) 참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의 경우, 성인 및 중복 보유자 12명을 제외한 조사 대상 아동 698명 중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684명이며,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 7명,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소재 파악중인 아동은 7명이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 중 250명은 시설 입소, 434명은 가정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의 경우, 총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 추가 확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더라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혹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전주 40대 여성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사망사건 상황 점검	복지정보기획과		과 장	정태길 (044-202-3160)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김지연 (044-202-3410)
	아동 조사 결과	아동학대대응과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 추진 경과

-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기반 발굴시스템 구축(‘15.12~)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입수정보 확대, 발굴 모형 개선을 추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율** 지속 증가
 - * (지원대상) (‘15년) 1.8만명 → (‘17년) 7.6만명 → (‘19년) 22.8만명 → (‘21년) 66.3만명 → (‘22년) 60.6만명
 - ** (지원율) (‘15년) 16% → (‘17년) 25.7% → (‘19년) 36.0% → (‘21년) 49.5% → (‘22년) 50.2%

□ 발굴 시스템 개요

- (절차) 매 2개월마다 단전·단수 등 약 18개 기관의 39종 위기정보를 입수·빅데이터 분석
 - 약 700만명의 정보수집 대상자 중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15만명을 선별, 지자체에 통보(연 6회)
 - * 지자체 자체발굴 포함 한 회차 당 약 20만명 규모 조사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방문, 전화 등)한 뒤,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발굴·지원 결과)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15년~’22.12월) 526.7만명을 조사하여 221.5만명(42.1%)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 향후 계획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근거를 既마련하였으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질병, 채무 등 위기정보를 확대*(39종→44종) 연계
 - * ①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② 수도요금체납 ③ 가스요금체납, ④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⑤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 통·이장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반의 발굴 체계 강화 추진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각호 및 제2항)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 ¹⁾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 ²⁾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 ³⁾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③ 중증질환 산정특례 ④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⑤ 장기요양 등급 2) ① 전세 기준금액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맞춤형급여 신청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세대원	

* ('22, 34종→39종)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23.하,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③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④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⑤ 가스요금 체납 정보

(1)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보유 아동 조사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 받은 아동('23.7.6일기준) 710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보호, 출생미신고 등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7월 17일(월)부터 진행되었다.

전체 조사 대상 710명 중 명단 추출 오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성인 9명,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3명을 제외한 아동 698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아동은 205명으로, 이 중 162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41명은 출생신고 전 급여 수급을 위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미신고 사유는 ▲친생부인의소, 친생부 추정 문제 등 혼인관계 문제 32명, ▲미혼부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하지 못한 경우 4명, ▲법원을 통한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2명 등이다.

*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입소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

조사 아동 698명 중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684명이며, 250명은 시설 입소, 434명은 가정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다. ▲7명은 해외 출국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7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보유 아동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기초생계급여,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보유한 아동의 소재·안전도 조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2)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 추가 확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5~' 23.5월생)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을 확인한 아동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던 아동 4명*을 제외한 224명을 대상으로 추가 확인을 완료하였다.

* (2명) 무혐의, (1명) 징역, (1명) 구속 수감 중

224명 중 사망신고완료 아동(55명)은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을 통해 확인된 아동(169명)은 추가적으로 사망 일시·장소·원인,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를 파악하였다.

①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확인

총 224명 중 보호자 2명의 아동학대 이력이 확인되었으나, 사망 아동 2명 모두 출생 2일 내에 의료기관에서 병사임을 확인하였다.

②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 및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 확인

총 169명 중 3명 아동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3명 모두 출생 3일 내에 의료기관에서 병사임을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밖에서 사망한 아동은 총 6명으로, 1명은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으나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명은 과거 검사 지휘로 검시 완료되었으며, 1명은 과거 사망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명은 형제·자매의 사망 이력이 없고,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도 없으며, 형제·자매가 잘 양육되고 있는 등 기타 의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총 2명을 추가적으로 수사의뢰하였다. 1명의 아동은 출생 1개월 후 사망이었으며 자택 내 사망으로 원인 미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며, 1명은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상세 내용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③ 경찰 수사의뢰 결과

2명 모두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명은 과거에 이미 경찰 수사된 건으로 당시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1명은 출생 다음 날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